

[종합]

광주·전남 복지사업 축소 우려

복지예산 900억 총당 분권교부세 2010년 폐지
장애인·노인시설 등 소외계층 혜택 줄어 들 듯
학계·전문가들 사회복지교부금 등 신설 요구

2010년이 되면 광주·전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포함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필요재원을 충당하고자 도입한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폐지와 함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는 이를 복지 분야에 쓰기보다는 '단체장 치적용인 시설·도로 등 건설 분야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각 지자체의 노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 등이 삭감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의 분권교부세는 404억 원으로, 전체 복지예산 6천400억 원 가운데 6.3% 수준이다. 전남도의 분권교부세는 473억 원으로, 22개 시·군을 제외한 도청 자체 복지예산 1조2천664억 원의 3.7% 규모다. 전체 복지 예산에서 분권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3% 수준에 머물렀던 하지만,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시행되는 개별 복지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10억 원 안팎의 소규모

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권교부세가 폐지될 경우 각종 복지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분권교부세만큼은 보통교부세에 편입하지 말고 별도의 교부금 항목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 '사회복지교부금'과 같은 항목을 신설해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된 교부금을 예산처럼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0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이를 보통교부세로 흡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며 "얼마나 지방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대체할 사회복지교부금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기·윤영기기자 redplane@



“행복한 가정 만듭니다”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부부들이 29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에서 베타기를 황토 물로 염색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다문화가족 부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L광주기자 mjna@kwangju.co.kr

모든 공기업 내년 임금·정원 동결

정부, 경영 효율화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내년도 공기업의 인건비와 정원을 동결하고 고강도 경영 효율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원도 사실상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통분담을 선

도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정원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 만큼 공공기관의 임금도 동결키로 했다”며 “정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늘리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An illustration showing a group of people in a community setting, with text indicating a focus on community and social interaction.

美, 한국 비자 면제
내달 17일부터 시행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워싱턴 부다페스트에서 VWP에 신규가입한 7개국이 다음 달 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과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VWP에 새로 가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VWP 개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도시인 ‘쌀 직불금’ 신청 원천 봉쇄

농식품부, 신청 대상자 거주지 ‘농촌’ 명시 추진

내년부터 농촌이 아닌 도시 등에 사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소득보

전 직불금’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쌀직불제 법률에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

이던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처럼 신청자의 거주지 조건이 규정되면 도시민의 대부분은 아무리 자신이 논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직불금을 탈 수 없게 된다. 위탁영농 여부 등에 관한 시비비와 상관없이 타워팰리스 거주 직불금 수령자의 가능성이 거주지

기준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관련 고시 기준을 준거로 삼는다. 현행 고시에서 농촌은 간단히 말해 행정구역상 ‘군’이하 지역, ‘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 등을 가리킨다.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일부 산지 등을 제외하고는 농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연합뉴스

광주 국제 교육도시 됐다
국내 3번째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각각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공유

광주시가 국내에서 3번째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했다. 광주시는 29일 “IAEC사무국으로부터 광주시가 IAEC 정식회원 도시가 됐으며, 이를 내년 IAEC 총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서류 데이터뱅크(BID-

CE)를 통해 각 도시 교육 프로그램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유네스코(UNESC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IAE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94년 창립해 35개국 400여개 도시가 회원

로 가입돼 있다. 대부분 유럽의 선진 교육도시들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가입해 있고 한국에서는 창원시와 순천시만 회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IAEC 활동을 통해 교육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IAEC 상임이사 도시에 선정돼 IAEC 총회를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檢,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김민석(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날 18일 김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구금지한 뒤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 최고위원을 소환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양가족 연말정산 편해진다
국세청 올부터 공인인증서 없어도
휴대전화 이용 등 동의 절차 간소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쉬워진다. 국세청은 29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올해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다양화,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여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inquiries, including phone numbers (062)227-9600 and (062)227-9500, and an email address design@kwangju.co.kr.

양도 양수 공고. A notice regarding the transfer of shares or assets, mentioning a company and contact details.

산행안내. A detailed hiking guide for November 1st, 2nd, and 3rd, listing routes, distan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rganizers.

산행안내 (Continued). Hiking guides for November 4th, 5th, 6th, and 7th, providing route details and meeting points.

산행안내 (Continued). Hiking guides for November 8th, 9th, 11th, and 13th, detailing various trails and group information.